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왜 대출이 먼저 보이나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회수하지만 생계비 용자는 근로자가 원금·이자와 보증료를 갚는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9월 1일 발표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고시를 대조해 지원금과 채무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02	연번	2026_85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2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용자를 임금 속도가 아니라 최종 상환의무로 구분한다. 대지급금은 법정 확인 절차 뒤 국가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한다. 용자는 체불 근로자가 요건과 신용보증 심사를 거쳐 빌리고 본인이 상환한다. 금리 인하만 강조하면 이 차이가 가려진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추석 전 임금체불 지원에서 생계비 융자금리는 10월 31일까지 연 1.0%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신용보증료 연 1.0%가 별도이고, 대지급금과 달리 근로자가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융자금리	연 1.0%	10월 31일까지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근로자신용보증
평시 금리	연 1.5%	집중기간 뒤 조정
재직자 요건	1년 내 1개월분 이상 체불	신청일 기준
퇴직자 요건	신청 전 6개월 이내 퇴직	법정 체불 범위
대지급금 처리	신청 후 7일 이내 추진	집중기간 한시

재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돼야 합니다. 퇴직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시 금리 1.0% 외에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료 1.0%가 별도입니다. 발표는 이 점을 함께 명시합니다.

대지급금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지급을 추진합니다.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는 모두 근로복지공단 창구를 거치지만 법적 성격과 상환주체가 다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임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일정한 도산·판결·체불확인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해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근로자가 국가에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계비 용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따른 대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대출계약에 따라 원금·이자와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용자는 체불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재직·퇴직 시점, 체불기간·금액, 신청기한과 신용보증 제외사유 등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1천만원을 1년간 거치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금리 1.5%에서 1.0%로 낮아져 이자는 5만원 줄어듭니다. 별도 보증료와 실제 상환방식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간에 신청해도 보증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선공제 여부와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용자만 안내받으면 갚지 않아도 될 지원 대신 채무를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원금	1천만원	설명용
금리 차	0.5%포인트	1.5%→1.0%
1년 이자 차	5만원	원금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
별도 비용	보증료 연 1.0%	실제 부담에 포함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실제 수령액

보증료의 징수·선공제 방식과 계약별 수령액은 신청 화면과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 대지급금 연계

용자 상담 때 대지급금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표준 절차가 있는지는 발표에 없습니다.

03 · 상환 정산

용자 뒤 체불임금을 회수하거나 대지급금을 받았을 때 조기상환과 비용 정산 방식은 계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 기간 종료

10월 31일 뒤 금리가 다시 1.5%로 조정될 예정이며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입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대지급금과 생계비 용자 가능성을 함께 문의합니다.
- 용자 신청 전 금리, 보증료, 실제 수령액, 거치기간과 총상환액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체불 기간과 금액, 급여명세서·계좌내역·체불확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금융회사

- 용자 약정 첫 화면에 금리와 보증료, 선공제액과 총상환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 대지급금 가능 여부를 문의할 공단 창구를 대출 안내와 연결합니다.

당국

- 대지급금과 생계비 용자의 요건·상환의무·처리기간을 한 표로 안내합니다.
- 집중기간 실적을 대지급금, 근로자 용자와 사업주 용자로 나눠 공개합니다.

갈림길**상담에서 대지급금을 먼저 점검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같은 창구에서 무상 대지급 가능성과 용자 필요성을 판단하는 순서

A

대지급금을 먼저 본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불필요한 채무를 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B

용자를 별도 접수한다
급한 근로자가 두 제도의 상환 차이를 모른 채 대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근로복지넷 신청 화면과 집중 청산 기간 운영 결과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2개의 연결 지식**

[피해 구제 임금체불 ↗](#)

[가계부채 생계비 대출 ↗](#)

근거와 검증**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생계비 용자 연 1.0%,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석 임금체불 지원 보도자료 · 2026-09-01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2	1차 · 재직자는 신청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체불, 퇴직자는 신청 전 6개월 이내 퇴직 같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3	1차 · 대지급금과 근로자 생계비 용자의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4	1차 · 대지급금 지급 뒤 국가의 임금채권 대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5	1차 · 생계비 용자의 신청서류와 신용보증 제외사유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 고시 · 확인 2026-09-0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6	파생 · 1천만원의 0.5%포인트 1년 이자 차이는 5만원 $10,000,000\text{원} \times 0.005 = 50,000\text{원}$. 보증료와 원금상환은 제외한 단순 계산 · 확인 2026-09-02

추적 예정	평시 금리 복귀, 실제 보증료 처리, 대지급금 우선 안내와 용자·대지급금별 지원 실적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체불 사실만으로 신청' 표현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의 재직·퇴직·체불기간 요건과 별도 신용보증료를 반영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제도와 법령을 비교한 것이며 개별 용자 승인이나 대지급금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건과 상환액은 신청일, 체불내역, 보증심사와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